

목포경찰,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완료

목포교육청과 합동...66개 초·중·고 화장실 등

학교전담경찰과 함께 하는 안전한 학교 조성목적

목포경찰서(서장 박인배)는 8월 4일부터 21일까지 (18일간) 목포 시교육지원청과 목포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학교전담경찰관(SPO)들과 함께 학교 내 화장실 등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합동점검단을 구성,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타 시도 일부 A초등학교 화장실 내에서 불법촬영카메라가 발견되면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64개와 특수학

교 2개 등 총66개의 시내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했다.

또, 합동점검단은 목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목포시교육지원청, 모니터링요원 등 각 3명씩 6개팀을 구성, 학교의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주파수 탐지기와 카메라 탐지기를 동원하여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점검과정에서 불법촬영카메라설치 등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의 한 관계자는 “최근 타 시도에서 발생한 학교 화장실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는데 이러한 합동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와 청소년관련 시설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로서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최근 이러한 불법촬영카메라설치로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환경으로 인식되는 듯 했다.

이번 목포경찰과 목포시교육지원청의 합동점검을 통해 다시한번 목포지는 안전한 학교환경이 확보되는 계기가 됐다.



한편, 목포경찰은 앞으로 교육지원청, 학교 등과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촬영카메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70대 어머니 폭행 40대 아들 2심에서 감형

“돈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어머니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 상처를 입힌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9개월을 선고받은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며 욕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잡이나 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소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상해를 가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존속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뒤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만취 상태로 어선 운항한 선장 적발

제주해양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에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근해안강망 어선 B호(49t)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항한 어선 B호는 같은 날 오전 8시33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3.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었다.

음주운항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어선 B호 내에는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남원서 발일하던 50대 트랙터에 깔려 숨져

23일 오전 8시 27분께 전북 남원시 금지면의 한 밭에서 A(52)씨의 트랙터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트랙터에 깔려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발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산 마린아 선박 전복...승선원 12명 모두 구조

전북 군산시 무너도(鳥) 인근 해상에서 선장 1명과 승객 11명이 타고 있던 ‘마린아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낚시아선에서 신속하게 구조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6시 18분께 무너도 남쪽 180m 해상에서 총 12명이 타고 있던 2.1t급 선박 A호가 암초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호는 전복됐다.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낚시아선(9.7t급)에서 A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을 구조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낚시아선에서 A호 선장과 승객 12명을 인계받아 새만금 신지항으로 이동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호는 배 밑바닥을 보이고 전복된 후 완전히 침몰했다.

해경은 통항하는 선박과의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정을 동원해 협지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조만간 침몰한 A호를 인양하고 레저보트 조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린아 선박은 유람이나 스포츠 또는 여가를 제공할 목적으로 승객으로 돈을 받고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6~27일 광주 금호2동 등 일부지역 수도물 공급 중단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사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이틀 간 서구 금호2동 등 일부지역의 수도물 공급이 중단된다고 23일 밝혔다.

단수 일정은 26일 오후 10시부터 27일 오전 6시까지며, 시민 편의를 위해 수도물을 주로 사용하

지 않는 새벽시간대에 작업한다.

광주시는 단수로 인한 불편에 대비해 대상지역 아파트와 상가 등을 사전 방문에 안내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다량의 병입 및 여울수(1.8l)를 준비했다.

단수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사전에 충분한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등 단수에 대비해야 한다.

광주시는 단수지역 내 24개 아파트 등에 담당 직원을 배치해 흐린물 출수에 대비하고, 아파트 저수조 유압밸브를 조절할 계획이다.

요유나 기자

아파트의 경우 시 관계자나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직접 조절해야 흐린물 출수를 막을 수 있어 관리소장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자세한 단수 지역과 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609-6101~7)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염병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단수이니 만큼 시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며 “단수 후 수도물 재급수 시 일시적으로 흐린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니 물을 틀어 흘려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요유나 기자

광주시·경찰·국세청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광주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국세청,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부동산 불법거래 유관기관 합동 단속 ▲부동산 단속 전담 수사인력 배치 ▲홍보 및 교육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정밀검증 강화 ▲부동산 거래동향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특별단속을 한다.

공인중개업소와 견본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 불법중개, 재건축·재개발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전담 수사인력 2명을 배치해 분양권과 청약 불법거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정밀검증은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동향과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

시민들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 캠페인을 한다.

정승호 기자

‘월급날이 코앞’ 금호타이어 압류계좌 풀기 법적공방 치열

‘가압류 취소’ 신청

나흘 후면 월급날을 맞는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압류한 회사 운영비 계좌 정상화를 위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

도급사가 고용한 근로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승소를 근거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이자 등이 포함된 채권 204억원을 지난달 30일 본권 가압류했다. 23일 광주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등법원 민사2부는 최근 금호타이어 측이 제기한 ‘계좌 가압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단행한 통장 압류를 풀기 위해 합의점 찾기에 나섰지만 상호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실패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금호타이어 측이 즉각적인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채권 압류’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가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계좌를 압류하자 금호타이어는 올 여름 휴가비와 지난달 수당, 670여 개사에 달하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지급불능 사태’를 겪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27일 8월분 급여 지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압류 사태가 장기화로 치달고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자 결국 지난 14일 광주고법에 공탁금을 거는 조건으로 ‘가압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